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재열



해방 이후 교육만큼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뀐 분야도 드물다. 교육제도의 근간인 대학입시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16차례나 변경됐다.

역대 정부마다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단발성에 그쳤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식상한 단어 중의 하나로 꼽힌다. 개혁이 오히려 혼란을 안겨주고 부담을 가중시켜 '개혁=새로운 혼란'이란 냉소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

혼란 부추기는 교육개혁

단 한 해만 실시되고 사라진 제도까지 있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논란을 거듭하

다 2008학년도 수능시험 때 도입된 수능 등급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정권 교체와 함께 각종 정책이 명멸하는 가운데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비는 치솟았다.

교육개혁, 조금증은 금물이다

현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매달 열리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사교육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교육개혁이 우려의 목소리로 적지 않다. 교육개혁의 목표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본질적 문제보다는 '사교육과의 전쟁'으로 바뀐 인상이 짙다.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일기내 실현하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수능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높여 사교육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이주호 교육부차관의 공언에도 교육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노무현 정부때도 나온 얘기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인 입학사정관제 역시 연착륙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단편적 지식을 기준으로 삼

지 않고 잠재력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그러나 막상 시행한 결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6·2 지방선거 여파로 'MB식 교육개혁'은 일단 수면 밑으로 잠복해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교육감 선거 결과는 기존 교육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의 표출은 썩다.

뿐만 아니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의 대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정책의 '우군(友軍)'으로 통했던 한국교총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전교조와 6명의 진보 교육감에 이어 교총까지 현 정부 교육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좌·우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교육현장 목소리 들어야

이제 일방통행식 교육개혁은 접어야 한다. 대통령부터 귀를 열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중에 교육 실수요자의 속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압급을 조절하는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은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 실패하기 십상이다.

임기 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조바심 역시 또 다른 일회성 정책만 양산할 뿐이다. 교육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국가 백년대계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만으로도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한계에 달했다.

<논설위원> ajkim@kwangju.co.kr

시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 세워라

정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계획이어서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재는 정부가 종부세를 걷어 수도권 23.3%, 비수도권 76.7%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로 통합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가 많은 수도권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민주당 당장 이정희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세수의 5547억원이 수도권으로 흘러들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지역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전남의 세수 감소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1080억 8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광주도 134억8100만원이 줄어 6대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올 한해 지방재정 감소폭은 16개

시·도 평균 4천억원이 넘는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남지역 군 단위 지자체 14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고 광주시와 자치구 예산도 이미 고갈상태다.

민선 5기를 맞는 지역 단체장들이 '텅 빈 공간'을 채우기에 고심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부세마저 재산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재정은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여건이 좋은 수도권 지자체는 더욱 윤택해지고 반대로 지방은 피폐해진다. 전남의 세수 감소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1080억 8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광주도 134억8100만원이 줄어 6대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올 한해 지방재정 감소폭은 16개 시·도 평균 4천억원이 넘는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남지역 군 단위 지자체 14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고 광주시와 자치구 예산도 이미 고갈상태다. 민선 5기를 맞는 지역 단체장들이 '텅 빈 공간'을 채우기에 고심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부세마저 재산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재정은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여건이 좋은 수도권 지자체는 더욱 윤택해지고 반대로 지방은 피폐해진다. 전남의 세수 감소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1080억 8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광주도 134억8100만원이 줄어 6대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이 교통 사고율 3년 연속 최고라니

전남이 교통 사고율(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그것도 3년 연속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남은 올 1~4월 교통사고율이 3.83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08년과 지난해에도 전국 최고였다. 지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호남선과 남해선 역시 고속도로 가운데 사고율이 각각 1, 2위였다. 교통 여류 시작일은 앞당겨졌고, 가을과 겨울 시작일은 늦어졌으며, 계절의 지속 기간은 여름은 18일 길어진 반면, 겨울은 22일 단축되어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졌다.

이렇게 우리 고장도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인데다 중앙분리대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사정 개선과 안전시설의 확대 없는 전남은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노령인구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점에서 도로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은 더욱 시급한 과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문화 수준이 그 지역의 격(格)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런 지표가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는 도로기반, 안전시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 단독 및 예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전남지역의 교통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이런 요인들이 타지역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열악한 도로기반과 턱없이 부족한 안전시설이 문제다. 실제로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역 내 많은 농어촌 도로는 편도 1차선

기고

조영순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7년 IPCC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는 명백하다. 이는 인류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1세기에는 20세기보다 기후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며

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계절의 시작일과 지속기간도 변화하였는데, 봄과 여름 시작일은 앞당겨졌고, 가을과 겨울 시작일은 늦어졌으며, 계절의 지속 기간은 여름은 18일 길어진 반면, 겨울은 22일 단축되어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졌다. 이렇게 우리 고장도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기후변화, 알고 대응하면 두렵지 않다

중대한 위기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폭설, 한파, 슈퍼태풍 등 이상기후에 의한 현상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전 지구의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1906~2005년) 0.74℃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7℃ 상승하여 도시화에 의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지구적 인 온난화 추세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호남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의 연평균기온은 과거 10년 동안(1940~1949년)에 13.0℃인데 비해, 최근 10년 동안(2000~2009년)에는 14.6℃로 1.6℃ 상승하였으며, 특히 최저기온의 상승 경향이 뚜렷하다.

전남도 지역의 광주, 목포, 여수, 완도, 순천, 해남, 장흥, 고흥 등 8개 지점의 최근(1973~2009년) 연평균기온은 14.0℃로서, 10년에 0.20℃의 변화율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전남의 연평균기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다가 1990년대 초 이후 전남의 기온보다 높게 나타나서 광주의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광주의 도시화에 따른 영향

서는 지난 4월 14일 광주·전남 지역 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에 관한 "기후변화와 미래" 포럼을 개최하여, 호남지방의 기후변화대응방안과, 지역산업 속에서 기후변화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과 호흡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증진과 이해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역량을 결집시켜 국민의 기후변화 이해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실현을 꾀할 수 있는, 지역기후변화특화센터를 설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누가 먼저 잘 움직이느냐, 즉 'Early & Smart Mover'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보다 빨리 대응하여 현재의 위기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장>

터미널·역 등 공공화장실 위생 더 강화해야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터미널 화장실을 곤잘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버스터미널 화장실 변기에서 검출된 세균의 양이 지하철 손잡이의 44배, 일반 화장실 손잡이의 11배나 된다고 한다.

검출된 세균은 면역력이 낮은 환자나 노약자들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과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과 각종 대장균류 등이 검출됐다고 한다.

사실 이런 터미널이나 기차역, 공공건물 화장실에 가보면 변기 뚜껑에 적잖은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래서 그곳에 앉기조차 싫은 경우가 많은데 그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 왕창

검출됐더니 더욱더 불결하다는 마음이 가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약 4~5년전부터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고 가꾸기를 해왔지만 세균이 이처럼 득실거리도록 방치한다면 실속없는 화장실 청결운동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세균이 날씨가 덥고 눅눅한 한여름에는 더 왕성하게 번식 할 것이다. 터미널이나 기차역, 공공기관 발원 운영 담당자 쪽에서 공공화장실에 대해 주기적인 살균은 물론 소독처리와 위생 변기 시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당국 또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바란다.

▲유치상·광주시 북구 누문동



최희동



이번 6·2지방선거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어느 정당도 압승했다고 큰소리칠 수 없도록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라도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4대강과 세종시, 언론약법, MB식 교육정책 등 많은 이슈로 인해 야당은 MB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를 부여했고, 반면 야당은 때마침

나라 MB나 한나라당이 싫어서 찍었다는 민심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공천과 정에서의 수많은 잡음과 경선관리의 문제점은 '과연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도 될까?'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가져왔다.

결국, 지금의 민주당 시스템이나 지적 구성으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사적이해관계를 공적 이익으로 포장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국

정치에도 디테일이 필요하다

터진 천안함 사건이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여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믿었다.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 예상은 출구조사가 발표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북풍의 효과가 가장 컸으므로 예상했던 강원도와 인천에서 야당 후보의 당선, 안방이라 할 수 있는 경남에서마저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밤새워 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당의 승인은 단연 단일화였다. 인천, 강원, 충남·북, 경남에서 당선이 가능했던 것은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도 있었겠지만 진보진영이 하나로 뭉친 결과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큰 격차가 예상됐던 서울이나, 경기 심지어 부산에서까지 단일화의 바람은 거세었다.

여기에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MB식 신보수주의에 대한 반발이 노무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번 6·2 지방선거는 MB 정권에 대한 민심이란, 민주세력의 단일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 회복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의 80%는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

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시스템개선, 인재영입 그리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의 경영 컨설턴트 왕중추는 자신의 저서 '디테일의 힘'에서 100가지를 다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주장한다. 그의 책을 보면 디테일에 실패해 큰일을 놓친 극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었든 '정치니까'라는 변명으로 '대충,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엄홍길의 휴먼리더십'을 보면 '평지에서 솟아날 수 있는 사소한 실수가 높은 곳에서는 팀 전체를 죽임으로 불고 갈 수 있다. 장비의 매듭 하나가 풀리는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디테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속담에 천외유천(天外有天)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말이다. 민심이 이와 같다. 국민 위에 또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소한 잘못 하나라도 고쳐나가는 진정성을 가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클럽'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Advertisement for hydrogen fuel cells (수소폭탄) with text and images.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newspaper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